

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추진배경

비전과 추진전략

부문별 정책과제

향후 추진 일정

0 1 0 1 0 1 0 1 1 1 0 1 0 1 1 1 0 1 1 0 0 0 1 0 1 1 1 0 1 1 1 0 0 0 1 0 1 0 1 1 1 0 0 0 1 0 0 1 0 0 1 0 0 1 1 0 1 0 1 0 1 0 0 1 0 0 1

101010101010101010101011101011101100010101110101



I

추진배경



국가군행발전위원회

1. 왜 2단계 정책이 필요한가?

그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중점

- 공공부문 주도의 국가기관 이전, 행복·혁신·기업도시 건설
- 인재·기술·산업이 결합된 내재적 지역혁신 역량 강화
 - ➔ 비수도권 GRDP 및 수출 비중 증가 등 성과

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 지속

- ☀ **수도권 인구 비중[%]**: (02)47.2 → (06)48.7
- ☀ **총사업체 수 비중[%]**: (02)45.6 → (05)46.6

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

- ▶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으로 획기적 지방발전 전기 마련
- ▶ 1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



〈참고〉 한미 FTA와 국가균형발전

단기적으로는 업종별·지역별로 효과 상이

- 직접적 수혜는 대미수출업종 밀집지역에 발생

- ★ 자동차(울산·충남·광주), 자동차부품(경남·경북·전북)
항만물류(부산·인천), 기계(부산·경남·경북), 철강(경북·전남)

-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어려움 호소



중장기적으로 FTA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

- 투자환경 및 대미교역 환경 개선 등 외국인투자 증대 기대

- FTA 계기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
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발판 마련

- ★ 2단계 균형발전정책, 낙후지역발전대책 등

2. 참여정부의 정책의지

-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
[02년 대선공약]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·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
[06. 9.19/10.17]

-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세 차등화, 복지·보육 등 획기적 정책 검토
[06.11.2, 제3기 균형위 출범시]

-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 개발
[06.11.29, 누리사업성과보고회]

3. 추진경위

06. 9

• 균형위, 2단계 대책 마련 착수

- 균형위 주최 전문가 회의 수차례 개최 (06.10~11)
- 정책실장 주재 전문가 회의 (국토연구원장, 산업연구원장 등, 06.11.30)
- 과제별 부처 실무협의 진행 (06.11~12)
- 정책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 (06.12. 8)

06. 12. 22

• 2단계 구상 시안 대통령 보고

07. 1월

• 주요기업 대상 의견 수렴

07. 1월

• 쟁점과제 대상 균형위-관계부처 협의 진행

07. 1. 25

• 정책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

07. 1. 26

• 대통령 주재 주요부처 장관회의 개최

07. 2. 7

•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[안동]



Ⅱ

비전과 추진전략



국가군형발전위원회

1. 정책비전

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

2단계
[민간부문]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

기업하기 좋은
투자환경 조성



살기 좋은
생활여건 조성

1단계
[공공부문]

다핵형 국토공간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
- 혁신도시·기업도시
- 공공기관 지방이전

지역혁신 역량 강화

- 지역혁신체계[RIS] 구축
- 지역 R&D 역량 강화
- 지역전략산업 육성

2. 추진전략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-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: 조세, 인력, 부지 문제 해결
-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: 주거 · 교육 · 의료 등 기반 확충

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

- 지방 대도시, 산업단지 클러스터,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
- 기업환경 · 생활여건 등 종합 패키지 지원

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

- 지역발전 정도, 투자환경 등을 감안 3그룹으로 분류
 - 분류[안] : 발전지역, 성장지역, 정체지역
- 지역분류, 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

Ⅲ

부문별 정책과제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정책방향

- 지방 창업 · 이전 ·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 · 인력 · 부지문제 집중 해결

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

- 지방 창업 · 이전,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
[1안]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(10~30년) 병행
[2안]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
※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
- 지역발전 정도,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
-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
[현행 : 대기업 15%, 중소기업 : 10%]
-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격차 체택 부여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② 인력난 해소

•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-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지급

※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

•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

-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
-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



지방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사업제도 도입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

● **저가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**

-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집중 지원
※ 필요 시 농업진흥지역 등도 적극 활용
- 혁신/기업도시에 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
[예] 평당 연간임대료 : 조성원가의 1% 미만, 임대기간 : 50년



● **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**

-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
- * 국무총리 소속의 「지방산업용지 애로타개위원회」 (가칭)를 두어 토지이용 규제 일괄처리
-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

1.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

⑥ 대기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-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
-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
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

-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②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

● 지방의 초중학교를 '지역복지 거점학교'로 운영

- 특기·적성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·복지·학습 거점으로 활용



● 지방 명문고교 육성

- 전국지역 대상 1군 1우수고 육성(136개교)
-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

학생선발 자유학기제 등

- 전문교과 전문인력, 여학생, 과학, 농촌 등 당시 미충족상 반영(20%) 확대
- 지방 초·중·고 영어만 영어보통교사 중점 육성(20%) 대폭 강화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(가)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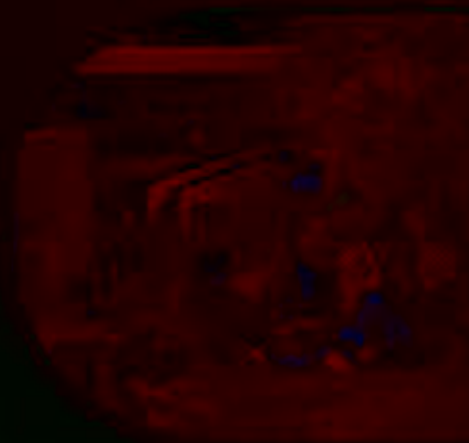
•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

- 매공계열 : 국가 장학금 지원 지역대학 확대 지원
- 민공계열 : 지방대학에 매공계열 장학금 지원 확대
- 장학 선별지원대상생에 대한 장학 확대, 장학금 지급률 향상



• 지방대학에 관내의 가옥사 지원

- 지방대학에 관내의 가옥사 지원 확대
- 지방대학에 관내의 가옥사 지원 확대
- 지방대학에 관내의 가옥사 지원 확대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
- 상속재산 지방대학 기부시 상속세 감면
-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


● **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지원**

- 지방대학 특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
[예] 인사교류·공동연구 등 포괄적 협약(MOU)체결
비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부담조건으로 분원 설치·운영 등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

-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공급



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 · 문화 · 복지 인프라 확충

- 혁신 · 기업 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지정
- 문화 · 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및 복지시설 확충 지원



2.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



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-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

-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%수준으로 확대

- ※ '07년 사회개발 지출 비중 : 36.2%

⑦ 지방재정 배분기준 확대



- ## 🍌 법안 국회 제출

